

# 어촌마을을 통해 본 기름유출사고의 장기적 사회영향: 2009년과 2015년 비교<sup>1)</sup>

김도균(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1. 서론

### 1) 연구목적

사고 직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재난복구활동이 진행되어왔다. 이 중에서 130만 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신속하게 오염원을 제거함과 동시에 피해주민들에게 사회적 인정(recognition)과 연대감을 제공하여 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이정림·김도균, 2011; 김도균·박재묵, 2012). 하지만 독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는 눈에 보이는 오염원을 제거했다고 해서 자연환경과 인간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유는 여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도균, 2011: 66). 그리고 개인 및 공동체의 재난피해는 그들이 갖는 취약성(vulnerability) 혹은 복원력(resilience)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이다(김도균, 2014). 즉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더 심각한 재난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고가 인간 및 기술실패로 발생한 기술재난(technical disaster)이라는 측면에서 복구과정에서 손해 배·보상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한다(Picou, Marshall and Gill, 2004; Freudenburg, 1997; Couch, 1996; 김도균·박재묵, 2012). 피해주민들은 법적 판결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지만, 가해기업 및 유류오염 국제보상주체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이하 IOPC기금)은 법적 판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사고발생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손해 배·보상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소송의 장기화하는 만큼 재난복구과정 또한 장기화한다. 즉 눈에 보이는 기름띠가 제거되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피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이 자동적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기름유출사고 발생 7년의 시점에서 기름유출사고의 장기적인 사회영향 혹은 재난복구 정도를 지역사회의 기초단위인 마을공동체 수준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마을수준에서 접근하는 주된 이유는 어촌사회에서 마을공동체는 피해주민의 삶의 복원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어촌주민들의 주요한 경제활동과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을 분석해야만 기름유출사고의 장기적인 재난피해 혹은 재난이후 주민들의 적응 및 대응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마을로는 태안군 ○○면에 위치한 A마을을 선정하였다. A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A마을이 2007년 기름유출사고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사고초기부터 언론과 관련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 사고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 양상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재열·윤순진, 2008; 김도균, 2011). 즉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한다면, 기름유출사고의 장기적 사회영향 혹은 복원정도를 확인해

1) 이 글은 필자의 두 편의 논문 '환경재난의 장기적 사회영향'(2015)과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실패와 재난복원력의 약화'(2012, 공저)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설문조사는 응답을 표준화할 수 있어 유사한 설문문항을 통해 사고 당시와 현재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어촌마을 주민들은 학력수준이 낮고,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문자문화보다는 구술문화에 익숙한 측면을 고려하여, 심층면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주요한 심층면접대상자는 <표. 1>과 같지만 이외에도 다수의 주민들과 접촉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 1> 주요 심층면접대상자

번호	성별 (연령)	주요 경제활동 (면접일자)	번호	성별 (연령)	주요 경제활동 (면접일자)
A	남(62)	횃집 및 펜션 운영(2014년 2월 28)	D	남(50세)	어선어업 (2015년 4월 5일)
B	남(61)	어선어업 (2015년 2월 28일)	E	남(55세)	어선어업 (2015년 4월 4일)
C	남(67)	민박운영 (2015년 2월 28일)	F	남(60세)	어선어업 (2015년 4월 4일)

설문조사는 세대별로 1인씩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지만 세대주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4일~5일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총 조사한 52개 설문지에서 가구원이 중복 조사된 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48부를 분석해 사용하였다.<sup>2)</sup> 세대주를 우선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남성(30명, 62.5%)이 여성보다(18명, 37.5%) 많았다. 그리고 연령분포를 보면, 50대와 60대가 66.7%로 어촌마을에서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가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기름유출사고이전부터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들로 평균 거주기간이 52년으로 오랫동안 마을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온 주민들이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기술통계
성별	남성	30(62.5)	N = 48
	여성	18(37.5)	
연령	40대	2(4.2)	N = 48 평균 = 65 표준편차 = 9.278
	50대	12(25.0)	
	60대	20(41.7)	
	70대 이상	14(29.2)	
거주기간	10~19년	3(6.3)	N = 48 평균 = 52 표준편차 = 17.024
	20~29	1(2.1)	
	30~39	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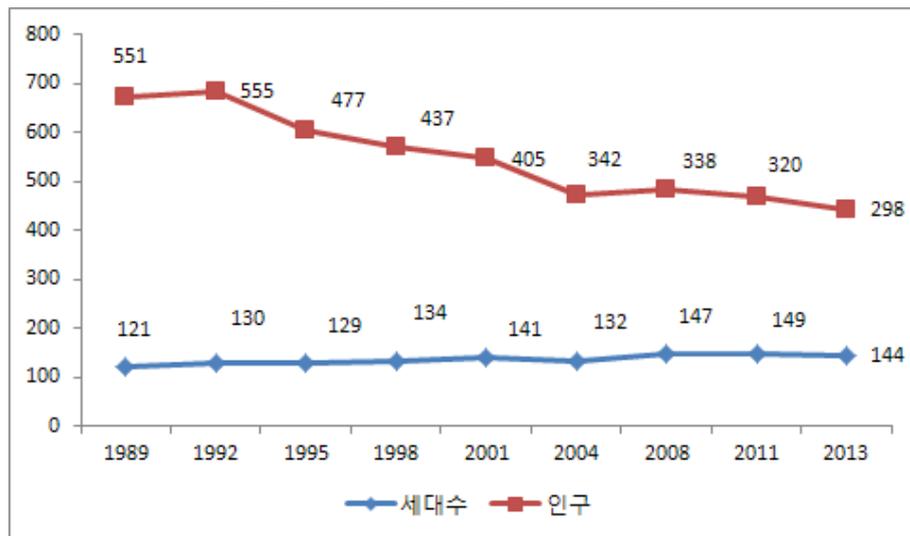
2) 모집단 144가구(주민등록기준) 중에서 48가구를 조사하였다. 모집단과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가구 수의 차이는 우선, 실제 거주하는 세대와 주민등록상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는 120여 수준이다. 또한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설문에 응할 수 없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다. 문제는 조사에 강한 거부 의사 밝힌 주민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조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그만큼 재난피해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40~49년	8(16.7)
50~59년	16(33.3)
60년 이상	16(33.3)

## 2. 조사마을 개관

A마을은 태안반도의 서북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서쪽해안은 암석절벽과 모래해변이 발달되어 있지만, 동쪽해안은 정반대로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다. 따라서 A마을은 일찍이 동쪽해안의 갯벌을 이용한 굴 양식어업이 발달했었다. 확인 가능한 1989년 자료부터 최근까지의 인구 및 가구 변동을 보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2011년까지 가구 수는 소폭 증가해왔다(<그림. 1> 참조). 가구 수의 증가는 해조류 및 조개류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마을에서 입어단위인 가구(호)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김준, 2004: 29),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이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도균, 2011: 97). 사고이후에는 가구 수 뿐 아니라 인구 또한 사고이전 비교하여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던 가구 수가 2013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마을의 인구 규모는 2004년에 2008년까지 단 4명만이 줄어들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8명, 2011년에서 2013년까지는 22명으로 사고이후 총 40명이 빠져나갔다. 이미 유출 가능한 노동력이 빠져나간 상태였던 작은 어촌마을임을 고려할 때 작은 규모의 인구 유출은 아니다. 따라서 평균 가구원 수도 2008년, 2.29명에서 2013년, 2.06명으로 낮아졌다.

<그림. 1> A마을의 인구 및 가구 수의 변화



출처: 태안군 『통계연보』 각 년도

사고당시와 현재의 주민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지속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60세 이상의 주민이 39.7%(2008년)에서 45.2%(2013년)로 5.5%p 증가한 반면에 20세에서 59세 주민은 48.9%에서 43.9%로 5.0%p 감소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없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A마을의 연령별 분포(단위: 명)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합계
2008	15 (4.3)	24 (7.1)	33 (9.8)	27 (8.0)	49 (14.5)	56 (16.6)	71 (21.0)	62 (18.7)	338 (100.0)
2013	15 (5.0)	17 (5.9)	21 (7.0)	22 (7.4)	31 (10.4)	57 (19.1)	66 (22.1)	69 (23.1)	298 (100.0)

자료: 태안군 내부자료(2014년 2월)

### 3. 장기적 사회영향의 양상

#### 1) 경제적 영역

##### (1) 경제활동의 변화 및 복원정도

A마을은 어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혼합형 마을로 교통여건의 개선과 마을에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사고 이전에는 관광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고이전 A마을주민들은 어업, 농업, 관광업 중에서 하나 이상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겸업비율(83.6%)이 높았으며, 현재에도 높은 겸업비율(80.9%)을 보이고 있었다(〈표. 4〉 참조).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경제활동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고이전과 비교해서 1순위 경제활동으로 어업을 선택한 비율이 24%p나 낮아졌다는 것이다. 반면에 농업을 1순위로 선택한 주민이 사고이전에는 한 사례도 없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14.9%p 증가했으며, 관광업을 선택한 비율도 12.4%p 높아졌다. 사고이전 A마을은 어업중심의 어촌마을로 농업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 던 것과 비교하면 작지 않은 변화다. 즉 사고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농지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관광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경제활동으로 취급했던 농업과 관광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어업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고이전 A마을 주민들의 1순위 경제활동은 굴 양식어업(71.7%)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어선어업(13.3%)의 비중이 낮았다. A마을은 마을 앞 넓은 갯벌을 이용하여 일찍이 굴 양식어업이 발달해왔던 전형적인 굴 양식어업지대였다. 그런데 유출된 기름에 의해 마을 앞 갯벌이 오염되면서 굴 양식장 시설을 전부 철거해 버렸다. 따라서 사고이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던 어선어업(34.0%)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굴 양식장으로 이용되었던 갯벌은 현재 바지락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로서 굴 양식장이 복원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굴 양식은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작 성격이 강한 양식어업인 반면에 바지락 양식은 채취 어업의 성격이 강한 양식어업이다. 현재 주민들은 바지락 양식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사고이전의 굴 양식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더 적은 의미(29.8%)를 두고 있다.

기름유출사고이후 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요한 경제활동이 굴 양식어업에서 채취어업의 성격이 강한 바지락 양식어업으로 변화했다. 반면에 사고이전에 중요성이 덜 했던 어선어업, 농업, 관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인식의 변화일 뿐 이 분야의 경제활동이

객관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어선어업과 관광업은 여전히 사고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외부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없었지만,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사고이전 굴 양식업과 관광객을 상대로 낚시 배와 민박을 운영했던 마을의 40대 초반의 한 남성주민은 현재 현금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귀향했던 이 남성주민은 사고이전 굴 양식업 및 관광업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이후 굴 양식업과 관광업이 쇠퇴하면서 마을 밖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4〉 경제활동의 변화(단위: 가구, %)

구분	사고이전			2015년 4월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어업	54(90.0)	31(60.8)	85(76.5)	31(66.0)	15(39.5)	46(54.1)
어선어업	8(13.3)	17(33.4)	25(22.5)	16(34.0)	3(7.9)	19(22.4)
양식어업	43(71.7)	7(13.7)	50(45.0)	14(29.8)	12(31.6)	26(30.5)
맨손(채취)어업	3(5.0)	7(13.7)	10(9.0)	1(2.1)	-	1(1.2)
농업	0.0	11(21.6)	11(9.9)	7(14.9)	16(42.10)	23(27.1)
관광	4(6.7)	6(11.8)	10(9.0)	9(19.1)	6(15.8)	14(16.5)
식당	2(3.3)	1(2.0)	3(2.7)	-	1(2.1)	1(1.2)
숙박	1(1.7)	5(9.8)	6(5.4)	6(12.8)	4(10.5)	10(11.6)
슈퍼	1(1.7)	-	1(0.9)	2(4.3)	1(2.6)	3(3.6)
일용노동	1(1.7)	3(5.9)	4(3.6)	1(2.1)	1(2.6)	2(2.4)
무직	1(1.7)	-	1(0.9)	-	-	-
합계	60(100.0)	51(100.0)	112(100.0)	47(100.0)	38(100.0)	85(100.0)
겸업비율	83.6%			80.9		

주: 한국의 어촌은 겸업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 경제활동을 두 개 고르도록 함.

출처: 사고이전 자료는 김도균(2011b: 101)

기름유출사고이전과 비교해서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38.3%)와 '회복되었지만 많이 부족하다'(40.4%)에 높은 응답(78.7%)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사고발생 만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활동의 복원 정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경제활동의 회복정도(단위: 명)

문)기름유출사고이전과 비교해서 귀하의 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까?	빈도	%
1)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18	38.3
2)회복되었지만 많이 부족하다	19	40.4
3)부족하지만 많이 회복되었다	8	17.0
4)사고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	4.3
합계	47	100.0

경제활동의 회복 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바다환경의 복원 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로 연결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유류오염 농도가 약해지면서 해양생태계가 사고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판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은 바다환경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56.2%)하다고 보았다(〈표. 6〉 참조). 전문가와 주민 사이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환경오염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과학자에게 환경복원은 오염물질의 수치 문제인 반면에 주민에게 환경복원은 사고이전 수준으로 어업이 회복되었는가라는 경험의 문제다. 주민들은 부족한 어획량과 사고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형물고기의 출몰을 들어 환경복원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sup>3)</sup>

〈표. 6〉 바다환경의 회복 정도

문) 사고이전의 상태로 바다환경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
1)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4	8.3
2) 회복되었지만 많이 부족하다	23	47.9
3) 기름 흔적이 남아있지만 많이 회복되었다	13	27.1
4) 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8	16.7
합계	48	100.0

## (2) 경제활동별 변화

### ① 어업의 변화

현재 A마을은 더 이상 굴 양식마을이 아니다. 사고이후 갯벌의 오염문제가 개선되면서 주민들은 굴 양식장을 재건하기 보다는 바지락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굴 양식은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양식장 시설을 갖추기에 위해서 최소 2~5천만 원 수준의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사고이후 뚜렷한 소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주민들의 노령화에 있다. 양식 굴의 생산과정은 채묘, 단련, 수하, 양성, 수확 등 5단계로 구분되면 각 단계마다 일정수준의 노동력과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바지락 양식은 종패를 뿌리 후 자연적으로 성장하면 채취하여 판매하는 단순한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할 별도의 투자비용도 없을 뿐더러 굴 양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 또한 약하다. 여기에 많은 자본을 들여 굴 양식장을 재건했는데 오염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sup>4)</sup> 즉 고령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보다 소득이 낮더라도 투자비용과 노동 강도가 약한 바지락 양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던 것이다.

“바지락 같은 걸로 조금했는데 올해 생선 처음 돈 한 6-7백씩 했지...그거나마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조개, 그렇게 벌어가지고는 천만 원, 오백만원 벌어가지고는 못 살아. (굴양식은)나이 먹어서 못해, 굴 양식은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최대 3천에서 5천만 원 투자해야 돼. 그런데 돈이 없어, 논 팔고, 밭 팔고, 집 팔아서 할 수

3)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서 사고이전에 본적이 없었던 등이 굵거나 반점이 있는 기형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구술을 여러 차례를 들을 수 있었다.

4) 다른 지역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이 지역에 품평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 A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2014년 1월 31일 여수 앞 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 이후에도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구술하였다. 즉 태안 앞 바다에서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는 품평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없어, 그래서 그냥 있는 데로 먹고살아야지. 그래서 다 포기한 거여(주민A, 62세).”

양식어업이 발달한 A마을의 어선어업 규모는 주변 어촌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개별 가구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의 한계로 인해 양쪽 모두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식어업은 어선어업보다 적은 투자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활동이다(김도균, 2011). 아래 <표. 7>를 보면 A마을은 3톤 미만의 선박들이 사고당시(80.0%)에나 현재(66.6%)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선어업 규모는 작은 편이다. 어민들의 구술에 따르면, 3톤 미만의 어선들은 주로 2km 이내의 마을 연안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반면에 3톤 이상의 배들은 상대적으로 먼 바다로 나가서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은 먼 바다를 나갈 수 있는 3톤 이상의 배들은 최근 몇 년간 꽃게의 어획량이 좋아 기름유출사고의 후유증에서 일정부분 벗어나고 있는 반면에 마을 앞 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도다리, 우럭, 주꾸미 등의 어획량이 사고이전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구술하였다. 마을에서 태어나 오랜 시간 어민으로 살아온 한 주민은 마을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가리키면서 “오늘날 같이 날씨가 좋을 날이면, 다 고기 잡으러 나가야 하는데, 바다로 나가도 잡을 고기가 없기 때문에 다 놀고 있는 배”라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어선어업을 설명하였다. 사고당시 A마을항구에 몇 척의 배가 등록되어있었는지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04년 62척의 배가 있었다(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54). 사고이후 축소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그 반 수준인 30척만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을 인근 바다에 조업하는 3톤 이하의 배를 중심으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A마을항구에 등록된 어선(단위: 척)<sup>5)</sup>

	1톤 미만	2~3톤 미만	3~5톤 미만	5~7톤 미만	7톤 이상	합계
사고당시	23(65.7)	5(14.3)	4(11.4)	2(5.7)	1(2.9)	35(100.0)
2014년 2월	30(57.7)	10(19.2)	7(13.5)	1(1.9)	4(7.7)	52(100.0)
2015년 4월	11(36.6)	9(30.0)	6(20.0)	1(3.3)	3(10.0)	30(100.0)

출처: 1. 사고당시 자료는 김도균(2011: 110)  
2. 2014년 자료는 해양경찰청 A리 출장소 내부자료(201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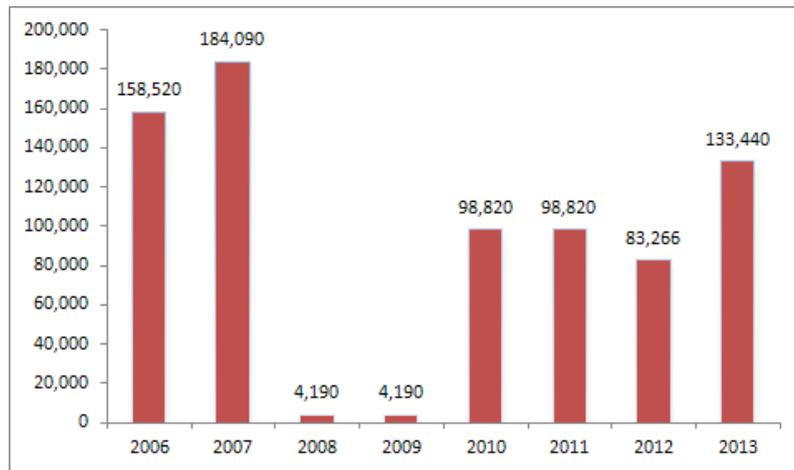
어민들은 마을 앞 바다의 어획량이 회복되지 못한 이유로 방재작업 당시 뿌려진 유화제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마을 앞 연안바다의 자원 고갈과 유화제 사이의 연관관계는 물속에서 맨 몸으로 작업하는 해녀들의 구술에서도 확인되었던 부분이다(김도균, 2012). 한 주민은 사고당시 마을을 방문했던 여수 시프린스호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앞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고 구술하였다. 즉 어선어업 규모가 작은 A마을의 어선어업은 여전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A마을 주민들이 어선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먼 바다로 나아 갈 수 있는 톤수의 어선은 더 많은 자본과 더 높은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굴 양식장 재건하지 못하고 바지락 양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자본 및 노동력 부족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어선 톤수를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5) 사고당시 어선규모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공식자료와 어선 수는 다를 수 있지만 어선 톤수 별 비율은 일치했다. 2004년 해양경찰청 A리 출장소 공식자료에 따르면 총 62척 중 2톤 미만이 41(66.1%), 3~5톤 미만이 13척(21.0%), 5~7톤 미만이 5척(8.1%), 7톤 이상이 3척(4.8%)이었다(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54).

## ② 관광업과 농업의 변화

사고당시 A마을은 관광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마을의 대표 관광자원인 ○○포 및 ○○해수욕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관광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주요한 농가부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A마을의 주요 관광자원인 두 개의 해수욕장은 사고이후 1년간 휴식기를 갖고 2009년 7월 새롭게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이전의 관광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고이전의 70% 수준으로 까지 회복하여 어업보다는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참조). 관광객 방문 통계자료는 2013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광업 종사 주민들의 구술과도 일치하였다.

〈그림. 2〉 해수욕장의 연간 방문객 수의 변화(단위: 명)



출처: 태안군 「통계연보」 각 년도

설명: 2008, 2009년도, 2010, 2011년도는 방문객 수가 일치하는데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하였음

A마을의 농업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 조건과 매립한 간척농지가 협소하여 영세한 수준이다. 사고당시 2,500평(0.83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가구가 전체의 85.6%를 차지했으며, 평균적인 경작규모도 1,875.19평(0.62헥타르) 수준에 머물렀다. 마을 내에 하우스 시설이나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가구가 없었으며 쌀농사를 중심으로 약간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수준이었다. 경작규모 및 시설, 재배작물 등을 고려할 때 A마을의 농업은 판매를 위한 상업적 목적보다는 자급적 목적이 더 강했다(김도균, 2011b: 107). A마을의 영세한 경작규모와 자급적 성격은 A마을 농인 자연적 조건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고이전보다 주민들이 농업의 경제적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농지규모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사고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도 경작규모 및 재배작물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즉 어업부분의 손실을 농업의 확장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 (2) 소득수준의 변화

사고이전과 비교해서 현재 소득의 회복 정도를 묻는 질문에 '사고이전보다 많이 줄었다'(78.7%)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월등하게 높았다(〈표. 8〉 참조). 즉 경제활동이 회복되지 못한 만큼

소득 또한 회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표. 8〉 해수욕장의 연간 방문객 수의 변화(단위: 명)

문)사고이전과 비교해서 현재 귀의의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손해보상금 제외)	빈도	%
1)사고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37	78.7
2)사고이전보다 약간 줄었다	9	19.1
3)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	2.1
4)사고이전보다 약간 늘었다	0	0.0
5)사고이전보다 많이 늘었다	0	0.0
합계	47	100.0

사고이전 A마을주민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천만 원에서 2천만 원(31.0%),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22.4%) 수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표. 9〉 참조). 어선어업이 발달한 인근 마을과 비교해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평준화되어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마을주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인 굴 양식업의 규모가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선어업과 관광업의 규모가 영세했기 때문이다(김도균, 2011: 116). 설문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만을 놓고 볼 때, 사고이전과 비교해서 500만원 미만(32.2%)과 천만 원미만(21.3%)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하였다(〈표. 9〉 참조).

이러한 이유는 우선 굴 양식과 비교해서 바지락 채취가 투자비용과 노동력이 적게 들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고이전 굴양식 규모가 작았던 주민들은 투자비용 및 노동력을 고려한다면, 바지락 채취가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바지락 양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A마을의 갯벌은 바지락이 잘 자랄 수 있는 서식환경이 완전하게 조성되지 못했다. 바지락 종패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바다가재의 일종인 쪽 제거 및 모래살포 등을 통해 꾸준하게 어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따라서 어촌계 담당자의 구술에 의하면, 오랜 시간 동안 바지락 양식을 해온 태안의 다른 마을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바지락 양식이 굴 양식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까지 성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A마을 주민소득(단위: 가구, %)

구분	사고이전	2015년 4월
500만원 미만	3(5.2)	17(32.2)
500~1000만원 미만	8(13.8)	10(21.3)
1000~2000만원 미만	18(31.0)	5(10.6)
2000~3000만원 미만	13(22.4)	6(12.8)
3000~4000만원 미만	11(19.0)	1(2.1)
4000만원 이상	5(8.6)	8(17.0)
합계	58(100.0)	47(100.0)

출처: 사고이전 자료는 김도균(2011: 116)

## 2) 사회관계의 변화

### (1) 주민협력과 주민갈등의 양상

기름유출사고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사회관계의 변화는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박재묵, 2008; 홍택화·구도완, 2009; 이재열·윤순진, 2009; 김도균, 2011). 하지만 재난이 재난피해자들 사이에 갈등과 균열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연대가 강화되고, 이는 재난을 극복하는 복원력의 변수로 작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갈등과 균열만을 강조할 경우 재난피해자들이 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되거나 공동체의 해체가 과장되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갈등과 협력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김도균, 2011: 156). 즉 재난피해자들은 서로 간에 갈등의 대상인 동시에 협력의 대상으로 복합적인 사회관계를 맺는다.

사고발생 14개월이 지난 2009년 2월 조사에서 A마을 주민들은 주민협력을 묻은 질문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40.0%가 나왔지만, 오히려 7년이 지난 2015년 4월 조사에서는 27.1%로 12.9%p 떨어졌다(〈표. 10〉 참조). 따라서 주민갈등에 있어서도 더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2009년 2월 조사에서 주민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이상의 응답이 53.5% 수준이었는데, 2015년 4월 조사에서는 64.3%로 10.8%p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응답은 2009년 5.2%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3.3%로 28.1%p나 상승했다. 즉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A마을의 주민협력과 갈등수준은 오히려 7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이 더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표. 10〉 기름유출사고 이후 주민협력과 갈등(단위: 명, %)

주민협력 수준	2009년 2월	2015년 4월	주민갈등 수준	2009년 2월	2015년 4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4(28.0)	8(16.7)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3(5.2)	16(33.3)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32.0)	27(56.3)	심각한 수준이다	28(48.3)	15(31.3)
이루어지고 있다	19(38.0)	12(25.0)	갈등이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20(34.5)	14(29.2)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1(2.0)	1(2.1)	갈등이 없다	7(12.1)	3(6.3)
합계	50(100.0)	48(100.0)	합계	58(100.0)	48(100.0)

출처: 2009년 2월 자료는 김도균(2011: 157)

사고초기, A마을은 1차 생계안정자금의 균등 분배와 주민들 사이의 높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의해 그렇지 않은 이웃마을과 비교하여 주민협력 수준이 높고 갈등수준이 낮았던 점을 감안한다면(김도균, 2011: 201), 2015년 4월 조사결과는 이전과 매우 상반된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사고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갈등이 점증적으로 증가해왔다거나, 협력관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갈등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난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협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협력의 사례를 들자면 어촌계 회원이 아닌 여타의 마을주민에게도 마을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어장의 생산성이 높았던 A마을어촌계는 계원을 98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어촌계원인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어장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주어졌다. 실제로 사고이전에는 철저하게 어촌계원만이 마을어장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사고이후 갯벌을 바지락 양식장으로 전환하면서 어촌계원이 아닌 마을주민에게도 어촌계원 만큼은 아니지만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었다. 현재 어촌계원에

게는 1일 60kg, 어촌계원이 아닌 마을주민에게는 30kg의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다. 이는 어촌계원이 아닌 마을주민들에 대한 마을어촌계 차원의 경제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촌계의 이러한 경제적 협력은 어촌계원과 마을주민 간의 인적 통합 수준이 높아(김도균, 2010: 86), 어촌계원이 아니면서 어업에 종사해왔던 마을주민의 수가 적었던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초기부터 수습과정에 앞장서던 이장과 어촌계장 등 핵심적인 마을지도자들이 교체되었다. 이장의 교체는 전임 이장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후임 이장이 선출된 자연스러운 교체였지만, 어촌계장의 교체는 치열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임 어촌계장은 기름유출사고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을의 조정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 어촌계장 연임에 성공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선거에서 36표를 얻어 58표(총 94명)를 얻은 도전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간에 경쟁이 있었지만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어촌마을의 어촌계장 선거에는 복수의 후보자가 경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2) 굴 양식어업 피해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

주민갈등은 오히려 사고발생 5년 만에 국내법원의 사정재판(2013년 1월 6일)을 통해 손해액이 발표되면서 접화되었다. 국내법원이 결정한 피해금액은 IOPC기금의 결정에 비하면 다소 전향적이었지만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피해정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sup>6)</sup> 손해보상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문항을 보면, '만족하지 않는다'(75.0%)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다'(25.0%)는 체념한 응답이 다음을 차지했다. 즉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단 한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표. 11〉 참조).

〈표. 11〉 기름유출사고 보상금액에 대한 만족 수준(단위: 명, %)

문)기름유출사고 보상금액에 만족 하십니까	빈도	%
1)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6	75.0
2)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다	12	25.0
3)만족하는 편이다	0	0.0
합계	48	100.0

6) 20013년 1월 6일, 사고발생 5년 만에 최초로 국내법원(서산지원)의 사정재판을 통해 손해액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후 채권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주민들이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내법원이 결정한 피해금액은 IOPC기금의 인정율보다 다소 높았다. 청구금액 대비 IOPC기금은 주민피해를 8.33%만을 인정했는데, 한국법원 14.26%를 인정하였다.

구분	국제기금('2013. 1. 7 기준)					사정재판('2013. 1.16 결정)					대비 D/A (%)
	청구		인정		인정율 B/A (%)	신청		결정		인정율 D/C (%)	
	건수 (명)	금액(A)	건수 (명)	금액(B)		건수	금액(C)	건수	금액(D)		
합계	28,959 (128,400)	2,775,284	4,780 (57,014)	184,464	6.65	127,471	4,227,148	63,201	736,074	17.41	26.52
주민 손해	28,898 (128,339)	2,163,557	4,772 (57,006)	180,247	8.33	127,436	3,633,622	63,167	518,200	14.26	23.95
수산	10,892 (110,333)	1,605,362	1,597 (53,831)	48,060	2.99	110,896	2,214,541	57,180	372,551	16.82	23.21
비수산	18,006 (18,006)	558,195	3,175 (3,175)	132,187	23.68	16,540	1,419,081	5,987	145,649	10.26	26.09
후순위 채권	61	611,727	8	4,217	0.69	35	593,526	34	217,874	36.71	3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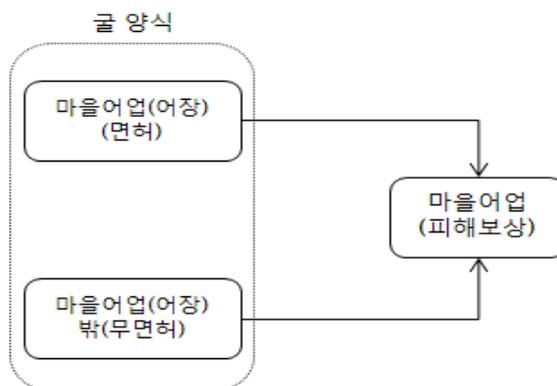
국제기금 및 사정재판 인정현황 비교(단위 : 건, 백만원)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13년 9월 25일)

국내법원 사정재판이 IOPC기금과 비교해서 더 높은 인정율을 보였지만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수준의 피해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주민들이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장했으며, 어획량이나 매출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손해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름유출사고 직후 사고의 충격으로 자살한 A마을의 한 주민(굴 양식)은 5,100여 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청구했었다. 국내법원의 사정재판 결과 1,374여 만원(26.9%)을 인정받았다. 이는 IOPC기금이 인정한 159만 4천원(3.1%)의 8배에 해당하지만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sup>7)</sup> 그러나 부족한 보상금액이 침해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보상금액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이는 사고 초기 태안지역 주민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생계안정자금 분배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도 유사하다. 즉 생계안정자금의 분배가 공정했다는 주민이 많은 마을일수록 주민갈등의 강도가 더 약하게 나타났다(김도균, 2010: 113). A마을은 모든 주민들이 바다를 기반으로 유사한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어떤 주민에게는 더 많은 보상액이 어떤 주민에게는 더 적은 보상액이 결정되었다. 물론 더 많은 보상액은 받은 사람도 낮게 보상액이 책정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지,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액의 차이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규모 차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갈등은 어선어업이나 관광업에 대한 개인적 피해보상이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마을어업으로 이루어져왔던 굴 양식에 대한 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 발생하였다. 사고이전 A마을 주민들은 굴 양식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사고이전 A마을 주민들의 굴 양식은 어촌계가 수산어법에 따라 면허어업을 획득한 ‘마을어업(어장)’으로 이루어진 동시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마을어업 밖에서 ‘무면허’로 양식이 이루어져왔다.<sup>8)</sup> 그런데 문제는 무면허 양식규모가 마을어업의 양식규모보다 클 뿐만 아니라, 무면허 양식까지 모두 마을어업으로 해서 피해보상이 나온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마을어장 밖의 무면허 양식까지 모두를 마을어업권으로 피해보상이 나왔다.

〈그림. 2〉 굴양식 피해보상



7) 김동이, <고인 된 태안 기름유출 피해자, 인정금액 0원> 오마이뉴스(2013년 1월 17일).

8) 수산업법 8조(면허어업) 6항에 따르면,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그리고 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에 따르면,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협동조합에만 면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 굴 양식 피해보상금의 분배 방식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의견대립이 발생하였다. 즉 한쪽에서는 마을어업으로 나온 것이니 어촌계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정재판의 결과대로 개인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대립은 사고이전 굴 양식장 규모에 따라 분과적으로 나타났다. 사고이전 상대적으로 굴 양식장의 규모가 작았던 주민들은 마을어업권을 내세워 공평한 분배를 주장한 반면, 무면허로 양식장 규모를 키워왔던 주민들은 개인의 피해를 내세워 사정금액대로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놓으니까 마지막 푸는 방법도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결국은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와있어요. ...참 설명들이기가 애매한데, 조사 자체부터 잘 못 되어 있고요. ...허가 면적은 요 만큼(마을어장)인데, 허가를 받지 않는 면적(무면허)이 이것의 10배,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허가)은 마을어장이니까 어촌계 거잖아요. 이(마을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무면허예요. 그런데 피해조사를 할 때는 이 섹터(마을어업) 안에다 무면허까지 다 넣고 조사를 한 거여. ...어촌계 것은 어촌계대로 조사를 하고, 개인 것은 개인 것대로 조사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이 섹터(마을어업) 안에다 넣고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을어업허가권(면허권)으로 해서 나온 것이니 같이 나누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굴 양식)했으니까 나온 거다. ...조사는 개인별로 했는데, (마을)어업권으로 돈이 떨어진 거죠. 조사부터 잘 못된 거죠. 어촌계 스스로 못하니까...법에 호소...잘못하면, 그 거 자체가 위법(무면허를 마을어업권으로 한 것)일수도 있다. 법에서 판결 받아서 해주는 것이 가장 원만하죠(주민D, 50세).”

조사과정에서 만난 주민들과 마을지도자들은 사고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마을공동체가 이 문제로 인해 큰 갈등이 있었음을 여러 차례 구술하였다. 이 문제가 첨예한 주민갈등으로 확장되면서 이를 중재하려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중재에 나섰던 한 주민은 세대를 걸쳐 오랜 시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인 만큼 서로가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무면허 양식을 마을어업으로 사정한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마을어업권을 내세워 개인적 피해에 지급한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도 법적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던 한 주민은 굴 양식 피해보상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주민은 13%,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10%, 3천만 원 이상은 7%를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피해보상액을 높게 받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후에는 마을어업권을 내세워 공평한 분배를 요구했던 주민들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사고초기 A마을은 주민들 간의 높은 경제적 동질성과 사회자본은 생계안정자금을 균등 분배하도록 자극하면서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재난극복을 위한 협력을 촉진시킨 측면이 있었다(김도균, 2011:189-204). 그런데 굴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둘러싸고는 오히려 높은 경제적 동질성과 집단의 규범을 강요하는 사회자본의 부정적 기능이 갈등을 불러왔다.

분배방식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마을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만 유발되었을 뿐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한 주민은 만일 “어촌계 굴 양식 피해보상은 어촌계대로, 개인이 받은 피해보상은 개인별로 나왔다면”, 굴 양식 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무면허 개인 피해까지 마을어업으로 사정한 사정체계에 대해 불만을 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갈등은 사고발생 7년이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주민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2〉 참조). 기름유출사고이후 사람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이가라는 문항에서 2009년 2월 조사(79.7%)보다 2015년 4월 조사(83.8%)에 14.1%p나 높아졌다. 주민갈등이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형태의 갈등은 아니지만 주민들 사이에 불

신과 냉소적 감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기름유출사고 이후 이웃 간의 심리적 거리감(단위: 명, %)

구분		2009년 2월	2015년 4월
문)기름유출사고 이후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이다	그렇다	47(79.7)	45(93.8)
	아니다	12(20.3)	3(6.3)
	합계	59(100.0)	48(100.0)
문)마을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신경이 쓰이거나 조심스럽다	그렇다	49(87.5)	39(81.3)
	아니다	7(12.5)	9(18.8)
	합계	56(100.0)	48(100.0)

출처: 2009년 2월 자료는 김도균(2011: 184)

#### 4. 결론

재난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재난이후 반드시 복구과정이 뒤 따른다.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경우에도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광범위한 복구과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가 독성물질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사고인 동시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피해 지역의 특징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의 장기화과정이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이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어업활동이 축소되어가고 있었으며 어업의 성격 또한 변화해 가고 있었다. 마을주민들의 주요한 경제활동이었던 굴 양식은 바지락 양식으로 대체되었으며 어선어업 또한 크게 축소되었다. 기존의 해수욕장과 정부의 투자로 개발된 마을 주변의 울레 길과 해양 전망대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결합하면서, 관광업은 사고초기와 비교하면 회복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활력 및 소득수준에 있어 여전히 사고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 또한 어두운 실정이다. 특히 부자마을이라는 평판을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굴 양식어업의 몰락은 심층적인 경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고초기 A마을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지만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협력의 수준이 더 높았다. 그리고 협력은 굴 양식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 간의 높은 경제적 동질성과 오랜 시간 어촌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해 축적해 온 사회자본에 의해 촉진된 측면이 있었다(김도균, 2011: 200-204). 그런데 현재의 시점과 사고초기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오히려 주민갈등과 냉소적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촌계원이 아닌 마을주민에게도 마을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다. 침체한 주민갈등은 굴 양식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피해조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마을어업(마을어장) 밖의 무면허 굴 양식까지 마을어업으로 해서 피해보상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마을어장 내에서 작은 규모로 굴 양식을 했던 주민들은 마을어업으로 나온 피해보상이니 어촌계원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무면허로 굴 양식장을 키워 온 주민들은 개인의 피해를 기준으로 나온 보상금액이나 사정재판 결과대로 각자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중재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초기 주민들 사이의 높은 경제적 동질성과 사회자본이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촉진한 변수로 작동한 반면에 굴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높은 경제적 동질성과 집단의 규범을 강조하는

사회자본의 부정적 기능이 갈등을 불러오고 있었다.

사고발생 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경제활동과 소득수준, 그리고 IOPC기금의 제도적 장벽에 막힌 불충분한 피해보상으로 인해 갈등이 '마을공동체 혹은 주민들 사이로 내부화'(홍덕화·구도완, 2009)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갈등과 냉소적 감정의 확산은 그 자체로도 재난피해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의 협력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가로막는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댐 건설 계획을 중지시킨 후 그 과정에서 형성된 리더십과 공동체의 연대가 지역재생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오비타니 히로아키, 2010: 264-276). 그리고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A마을과 이웃한 기름유출 피해마을에서도 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축제를 통해 새롭게 지역사회를 활성화해 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A마을에서도 몇몇 마을리더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갯벌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에 관한 청사진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실현할만한 주민들의 및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다. 즉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냉소적 감정의 확산은 A마을의 재난복원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재난복구는 장기적 과정으로 재난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난복원력은 “위난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공동체 시스템이 신속하게 회복하는 대처역량 및 능력”(McEntire, 2001; 류현숙 외, 2009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재난 복원력은 주로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 복원력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지방행정조직과 다양한 비공식 모임 및 행위자들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홍영란·이재열, 2009). 재난은 인간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불확실성은 행위자들이 최적의 행위를 선택할 수 없게 하며 때로는 잘못된 행위를 선택하게 하여 오히려 재난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이후 관련 행위자들의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거버넌스는 재난복구과정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재난복구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삶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재난피해자들은 단순히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복구의 주체이다. 특히 외부의 지원정책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주민전체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교헌·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환경사회학연구』 12(1): 81-107.
- 김교헌·김세전·권선중. 2009. “태안 주민들의 재난 후 스트레스 반응: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3(1): 89-125.
- 김도균. 2011. 『환경재난과 지역사회의 변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재난』. 한울아카데미.
- \_\_\_\_\_. 2012. “기름유출사고가 해녀공동체 미친 사회영향: 태안 구포리 해녀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0: 191-230.
- \_\_\_\_\_. 박재묵. 201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실패와 재난복원력의 약화: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ECO)』 16(1): 7-43.
- \_\_\_\_\_. 이정립.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 태안군 가의도를

-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2(2): 119-152.
- \_\_\_\_\_. 2014. “환경오염 사고의 이차적 피해와 복구과정: 장항제련소 주변 A마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267-295.
- \_\_\_\_\_. 2015. “환경재난의 장기적 사회영향: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7년의 시점에서 본 어촌마을” 『환경사회학연구』, 19(1): 97-130.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12(1), 43-82.
- \_\_\_\_\_. 2009. “고도 불확실성의 재난상황에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인지와 소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3(1): 49-87.
- \_\_\_\_\_. 2010.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불확실성.” 『환경사회학연구』, 14(1): 99-124.
- 박순열·홍덕화. 20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사회적 재난의 파편화와 사사화.” 『공간과 사회』 34: 142-180.
-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12(1): 7-42.
- 소원면지 편찬위원회. 2002. 『소원면지』 .
- 이시재.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연구.” 『환경사회학연구』 12(1): 109-144.
- \_\_\_\_\_.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13(1): 127-171.
- 이재열·윤순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연구: 태안군 석포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환경대학원.
- 이정림·김도균. 201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피해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취약성 변수: 사고 후 2008년 9월과 2010년 10월 시점의 패널자료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15(1): 53-84.
-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태안 개미목마을: 어촌생활의 파노라마』 . 대원사.
- 홍덕화·구도완. 2009. “헤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13(1): 7-47.
- Couch, Stephen R, 1996.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ommunity Transformation and the Central mine fire." James K. Mitchell(ed). The Long Load to Recovery: Community responses to disaster.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Freudenburg, W. R. 1997. "Contamination, corrosion and the social order: An overview." 『Current Sociology』 Vol 45, pp. 19~40.
- .Picou, J, Steven and Marshall, Brent K and Gill, Duane A. 2004,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Vol, 82, No. 4, pp. 1493~1522.